

## SAFETY

ISSUE PAPER

TALK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 탄핵과 체포에 묻혀버린 안전과 건강

새해가 되면 정부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반드시 챙기는 중요한 취재일정이 있다. 바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다. 각 부처에서 수장인 대통령에게 한 해의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다.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이지만 말 그대로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부처의 한 해 계획을 설명하는 의미를 갖는다.



### ● 새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경제 리스크 관리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혐의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어김없이 새해는 받았다. 그리고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대통령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업무보고 1번 타자로 등장한 건 무려 9년 만이다.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10~20% 보편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시즌2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경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상으로 보인다. 위태위태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이날 보고는 전날 재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뉴스에 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는 1월 10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사회1분야'로 묶여 이뤄졌다. 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노동개혁 동력이 상실된 당대에 과연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어쨌거나 이를 위해 연초부터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다양화를 위한 현장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 올해도 “노사자율 기반한 안전보건체계 확립”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눈길’

중대재해 예방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노사자율에 기반한 안전보건체계 확립’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3만 4천 곳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을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업종별 표준모델도 개발한다. 상반기 안에 배달노동자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하청 안전보건상생협력에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전동행지원사업 지원대상에 50인 이상 사외하청업체를 포함하고 관련 예산으로 3천32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시행에 따른 사업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가 신설되면서 사업장에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 조치가 의무화됐다. 노동부는 건설, 물류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설비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해 노동자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물질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최근 산업현장에서 증가하는 이동형 로봇과 관련해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정비하기로 했다. 지게차 AI 영상인식 같은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지원에도 35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들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거의 모든 뉴스를 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영장 발부에 가려져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벚꽃대선(3~4월), 장미대선(5~6월)을 넘어 폭염대선(7~8월)까지 언급되는 요즘,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데 정치권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정부의 공백이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공백을 옹계 메우는 수밖에. 🗣

